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00
----------	------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 의 자 : 유동수 · 강민정 · 김두관  
김승원 · 김한정 · 남인순  
양정숙 · 오영환 · 이성만  
이학영 · 전해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 등으로의 이첩 여부 결정 등 신고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리가 제한되어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59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부패행위 등 조사) ① 위원회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부패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조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을 할 수 있고, 이첩 또는 고발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 “신고”, “접수된 신고사항” 및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는 “위원회가 인정한 부패행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 의견·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55조의2(부패행위 등 조사) ①</u>  <u>위원회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부패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조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u>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을 할 수 있고, 이첩 또는 고발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u>  <u>이 경우 “신고사항”, “신고”, “접수된 신고사항” 및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는 “위</u></p>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⑦ (생략)

제91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원회가 인정한 부패행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 의견·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u>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③ · ④ (생략)</p>	<p>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u></p> <p>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u></p> <p>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자</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